

공약실천계획 시민배심원단 권고안 수용여부 검토결과

□ 원안찬성 15건 : 33개 권고안(수용 17, 수용불가 15, 장기검토 1)

공약명 (추진부서)	배심원단 권고안	수용여부 검토 결과	
		수용여부	수용(수용 불가) 사유
(1-1-3) 에너지신산업 특화 산단 육성(도시첨단산단) (에너지산업과)	① 한국전기연구원 한전 등 지역 대학과 연계한 실무(인턴)등 취업을 위한 정책 집행 필요	수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전력공사는 광주.전남 소재 공고 및 대학생 대상 (390명/연)으로 에너지신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 3개 과정 운영 등을 통해 지역대학 채용기회 확대를 추진 중임. ○ 한국전기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신규직원(정규직, 비정규직) 채용 시 우리지역 대학과 연계 인턴십을 통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추진
(1-16-1) 전통시장 대학생 협력사업 지원 (민생경제과)	② 대학생과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단순 재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건비도 확보	수용불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사업은 전통시장의 소비계층(40~60세) 편중과 상인 고령화(평균 56세) 및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전통시장 침체에 따른 시장 자생력 모색방안으로 전통시장과 대학을 연계하여 미래고객(청년) 등 고객 눈높이에 부응하는 상품, 콘텐츠,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매출증대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한 중소벤처기업부(소상공인진흥공단) 주관 국가직접 사업임 (국비100%) ○ 배심원들이 권고한 학생들에 대한 직접 인건비 지원은 좋은 아이디어로 여겨지나 별도의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함이 필요함 - 지원내용: 운영비(재료비, 일반수용비, 임차료) 여비, 일용임금 등 ○ 따라서 중기부의 지침에 따라 참여학과(동아리) 학생들을 관리하는 인력의 인건비와 사업수행을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비(교육, 자문 등)를 제외하고 상인에게 직접 지원되거나 참여 대학생에 대한 실비 지원은 어려운 사항임

공 약 명 (추진부서)	배심원단 권고안	수용여부 검토 결과	
		수용여부	수용(수용 불가) 사유
(2-1-3) 국립 트라우마 치 유센터 조성 (건강정책과)	③ 국가폭력에 관한 실태파악이 우선	수용	○ 현재 행정안전부「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추진」 중으로 용역과제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
	④ 트라우마 및 센터에 관한 상세한 홍보 필요	수용	○ 국가가 피해자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임으 로 국민신뢰회복 및 안전환경 조성에 기여하므로 적 극적인 홍보가 필요함
	⑤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시민의 의견 수렴	수용불가	○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용역이 추진중('18.7~12월)으로 시민의견수렴이 어려움
(2-2-1) UN 산하 인권교육 기관 유치 (인권평화협력관실)	⑥ 15억 예산을 절감, 국비확보가 필요	수용불가	○ 인권관련 국비사업 부재 ※ KOICA(한국국제협력단) '인권교육 글로벌 연수사업' 유치 추진 중
	⑦ 유치 준비 과정에서 공무원 및 행정가 중심이 아닌 각 영역별 인권 활동가 등 현장 실무자의 참여 필요	수용	○ 유치 준비단계에 민간영역의 현장실무자 참여로 완성도 높은 유치제안서 초안 작성 등 가능
	⑧ "지역사회 및 국내 인권 진영 등 의견 수렴' 항목이 18년 12월 한 달이지만 기간을 3개월 정도로 늘리고 적극적으로 홍보	수용	○ 인권교육기관의 내부 콘텐츠 구성 등 세부사항까지 폭넓은 의견수렴 가능

공 약 명 (추진부서)	배심원단 권고안	수용여부 검토 결과	
		수용여부	수용(수용 불가) 사유
(2-4-7) 비리에 대한 불관용 원칙 확립 (감사위원회)	⑨ 검찰위원회 위원들에 전문가적 교육 필요	수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문기관 교육을 통한 감사전문지식 제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감사교육원 교육시간 의무이수(40시간/인) - 직렬별 전문 교육이수(행안부, 감사원 등) - 감사관련 전문자격증(내부통제평가사) 취득 ○ 광주시 감사관계관 합동 연찬회로 감사기법 공유
	⑩ 광주시 공무원은 공무원 연수 및 인터넷 강의를 제외한 광주시만의 새로운 교육을 도입 후 인사고과에 반영	수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직원 의무 청렴교육 이수(개인별, 부서별 청렴 평가 지표에 반영 - 유공 공무원, 부서 선정시 반영) ○ 청렴 우수 공무원 시장표창 및 포상, 청렴 우수부서는 BSC 평가에 가점(부서장 성과와 연계)
	⑪ 비리예방활동에 관해서는 특별한 안이 없는데 새로운 예방책을 강구	수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취약시기 등 예방 감찰 활동으로 비리 사전차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취약시기(7개반 24명), 연중(1개반 5명) ○ 비위사례 전파 공개로 비리 사전 예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범죄 유형·조치 결과 공개 및 사례집 배부
	⑫ 특별감찰반의 임기가 끝난 후 사후보호조치 필요	수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감사담당자 감사기강 확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감사요원의 복무 및 행동강령 강화 - 재직중 비위 연루 시 타부서 전출 및 가중처벌 ○ 감사담당자 인사상 우대조치(건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보시 희망보직(부서) 배치 - 1년이상 근무자 실적가점 부여(월 0.04점)

공 약 명 (추진부서)	배심원단 권고안	수용여부 검토 결과	
		수용여부	수용(수용 불가) 사유
(3-11-1)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확대 (고령사회정책과)	⑬ 사업형태 중 시장형 중심으로 확대	수용	○ 3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발굴 ○ 2018년도 깔끄미 사업 확대 및 신규 일자리 창출
	⑭ 노인일자리를 노노케어 부분으로 확대	수용불가	○ 유사 재가서비스(자활간병서비스, 노일돌봄종합서비스, 노인장기요양보험, 복지도우미, 방문요양서비스 등)를 받는 수혜자는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수혜자 선발 어려움 ○ 참여자가 수혜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, 수혜자가 원하는 시간대가 다양하여 선정 어려움
	⑮ 대상자 선정 과정 개선(공정/투명)	수용불가	○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지침의거 대상자 선정 ○ 대상자는 공개모집, 선발은 선발기준표 점수에 근거함
(4-3-2) 역사 박물관 건립 (문화예술진흥과)	⑯ 운영(TF)팀 설치, 전시 및 자료 확보 계획 수립이 우선	수용	○ 전시자문위원회를 구성, 현재 진행 중인 '시립민속박물관 개보수 및 광주역사공간 구축'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수용
	⑰ 문화예술회관 내 미술관 분관 리모델링비로 예산목을 변경하여 사용	수용불가	○ 상기 사업에 따른 국비확보를 위해 문체부의 사전평가 시, 사업범위를 박물관 내로 한정했고, 상기사업이 이미 상당부분 진전된 상황이므로 현 단계에서 사업변경이 불가함

공 약 명 (추진부서)	배심원단 권고안	수용여부 검토 결과	
		수용여부	수용(수용 불가) 사유
(4-7-2) 송정역 일대 KTX 투자 선도 지구 개발 (교통정책과)	⑱ 송정역 인근부터 개발(승하차시 조망)	수용불가	○ 송정역 인근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시와 광산구 등이 도시재생 차원으로 장기 추진 ○ 국토부 공모시 지정한 면적 이외 추가 편입 불가 (추가편입시 토지 가격상승으로 사업성 결여)
	⑲ 한국철도공사와 협의 및 타부서와 협업 (지하주차장 계획 필요)	수용불가	○ 한국철도공사가 주차건물 신축을 준비중에 있으나 지하주차장으로 건설시 공사비 증가
(4-10-1) 주민참여기반 구도심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(도시재생정책과)	⑳ 환경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후주택 정비, 낙후지역 재생사업 추진	수용	○ 작은도서관, 무인택배함 등 생활밀착형 SOC 확충을 통해 노후주택지를 정비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
	㉑ 거주민과 더불어 외부 전문가 영입	수용	○ 전문가를 포함한 민·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주거지재생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,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재생 추진

공 약 명 (추진부서)	배심원단 권고안	수용여부 검토 결과	
		수용여부	수용(수용 불가) 사유
(5-1-1) 대중교통체계 변화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개편 (대중교통과)	㉔ 주변도시 연계 노선과 환승 제도 보완	수용 (기시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계 외 운행 시내버스 현황 : 13개 노선 67대 645회 - 운행지역 : 나주시(3개 노선), 담양군(4개 노선), 장성(3개 노선), 화순(3개 노선) ○ 광주 운행 농어촌버스('17. 8월 기준) : 12개 노선 222대 2,022회 - 나주시(4개 노선), 담양군(4개 노선), 장성군(1개 노선), 함평군(1개 노선), 화순군(2개 노선) ○ '13. 7월부터 광역환승할인제도 시행(광주 교통카드 요금 기준 50% 할인)
	㉕ 광주시 내 소외된 지역 없이 발달된 도심 지역과 덜 발달된 도심 지역의 균형 잡힌 교통체계 만들기	수용 (기시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17. 2월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및 마을버스 8개 노선 신설로 사각지대 해소 등 균형 잡힌 교통체계 구축 추진 - 노선수 : 98개 → 101개 노선(3개 노선 신설) - 노선조정 : 39개 노선 - 마을버스 8개 노선 신설 → 5개 노선 운행
(5-1-6) 도시철도 2호선 건설 (도시철도건설본부)	㉔ 지선을 만들어서 도심내 접근성 높이기	수용불가	○ 지선 건설은 2호선 사업과 별도로 추진해야하는 사업으로 상위계획 미수립 및 예산 미반영으로 향후 지선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승인 후 추진 가능함.
	㉕ 지상 부분 없이 지하로만 2호선을 건설	수용불가	○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지상구간은 실시설계과정에서 지하로 변경되었으며, 2단계 구간은 현재 기본설계 중으로 사업비 증액 등 제반요건을 고려하여 검토예정.

공 약 명 (추진부서)	배심원단 권고안	수용여부 검토 결과	
		수용여부	수용(수용 불가) 사유
(5-5-2) 전기차 보급 확대 추진 (자동차산업과)	㉔ 공공장소의 충전소를 확대하고 홍보 필요	수용불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리시 관내 공용 충전기는 총 223기(급속 82, 완속 141)가 설치되어 운영 중임. ○ 우리시 및 환경부에서는 공공장소 내 충전기 확대를 현재 적극적으로 기 추진중에 있으며, 올해말까지 급속충전기 60여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. ○ 또한 공용충전기 설치 시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등록중이며, 어플 등에 자료가 제공 중으로 있음.
	㉕ 자동차 회사에 대한 연구개발 보조 필요	수용불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리시는 자동차 부품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국가 직접사업 및 市 자체사업을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. ○ 다만, 전기차 제작사는 대부분 대기업으로 차량개발에서 양산까지 기업 이윤 창출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영역으로 사료됨.
	㉖ 전기차 충전소는 판매자가 책임지는 방안 마련	수용불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기자동차는 친환경자동차로서 정부정책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자동차회사에 충전소를 책임지라는 방안은 충전소 설치 비용이 차량가격을 높이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. ○ 현 환경부에서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완속충전기 지원사업 및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	㉗ 차량 보급부서와 관리부서를 통합	수용불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기자동차 보급은 우리시 예산과 환경부 국비로 지원하여 보급되고 있으며, 충전기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자체 추진되고 있음. ○ 다만, 완속 충전기 설치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 환경부 일괄 추진중이며, 공용 급속충전기는 4개 부처기관을 통해 설치 및 관리되고 있는 사항으로 차량 보급부서와 충전기 관리부서 통합은 어려움이 있음.

공약명 (추진부서)	배심원단 권고안	수용여부 검토 결과	
		수용여부	수용(수용 불가) 사유
(5-11-1) 광주 온도 1°C 낮추기 사업 지속 추진 (기후대기과)	㉔ 일상생활 습관, 문화를 고쳐 나가는 개몽운동 병행	수용	○ 기후변화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시민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주민홍보 및 지원사업 추진중 - 탄소포인트제 운영,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- 저탄소녹색아파트 조성사업, 녹색식생활 조성사업 - 저탄소녹색 실천운동,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
	㉕ 6개국 27개 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추진기구 신설	장기검토	○ 광주온도 1°C 낮추기 사업관련 6개국, 11개부서, 27개 사업에 대한 취합 및 실적확인 등은 기후대기과에서 총괄 ○ 별도 추진기구 신설은 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가능
	㉖ 도심내의 운영 차량 총량제 실시 - 차량1대 폐차시에 1대 구입할수 있도록 규제 - 차량보유대수에 따라 중과세	수용불가	○ 지방세법 개정 필요 -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자동차세 산정 ○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- 온실가스 주범인 매연을 발생시키는 경유자동차에 대해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하고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음
	㉗ 고층 아파트 건설 제재 필요	수용	○ 담당부서별 추진중 - 건축주택과 : 가로구역별높이제한 추진(추진중) · 아파트 층수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해당 지역·지구내 건폐율, 용적률 등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, 인허가시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제재하기는 어려움 · 다만, 우리 시의 획일화된 아파트 공급을 지양하고 보다 광주다운 아파트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및 공동주택 심의규칙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 - 도시계획과 ·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개선대책 마련(추진중) · 광주광역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마련(완료)

□ 폐기권고 1건(수용불가 1)

공 약 명 (추진부서)	배심원단 권고안	수용여부 검토 결과	
		수용여부	수용(수용 불가) 사유
(3-10-1) 권역별 노인 건강 타운 확대 (고령사회정책과)	① 접근성 및 이용빈도를 높이기 위해 대규모 소수 시설보다 중소형 다수 시설 건립 필요	수용불가	<p>○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인여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중인 건강타운은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서부권 어르신들의 타운 이용률이 저조함.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p>- 우리시 고령인구 증가추이 : ('05)7.1%⇒('18)12.4⇒('21)14.1⇒('28)20.1 - 타운 일 이용자수 : 빗고을(4천여명), 효령(1천여명) - 회원등록 현황 및 지역분포 : 71,196명(동구11%, 남구30, 북구30, 서구20, 광산9)</p> </div> <p>⇒ 노년층의 문화·여가활동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노인여가시설 이용격차 및 불편지역 해소,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권역별로 특화된 복합시설 필요</p> <p>⇒ 주·야간, 주말에도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·운영하고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의 일자리, 사회참여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노인복합여가시설로 건립하겠음.</p> <p>⇒ 또한, 지역별로 기 구축·운영되고 있는 복지관, 경로당 등 다수의 소규모 시설과의 연계강화 등으로 풀뿌리 단위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음.</p> <p>* 우리시 중소형 노인복지시설 현황 : 경로당 1,313개소, 복지관 7개소</p>

□ 통합권고 1건(수용 1)

공약명 (추진부서)	배심원단 권고안	수용여부 검토 결과	
		수용여부	수용(수용 불가) 사유
(2-4-1) 518인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(정책기획관실)	① 시민권익위원회와 의의 및 활동 내용에 겹치는 부분이 많으므로 시민권익위원회의 틀에 518인 시민통합위원회의 장점을 합치는 방향으로 추진	수용	○ 518인 시민통합위원회와 시민권익위원회는 시민들의 참여민주주의, 숙의민주주의 나아갈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흡사하고 시민참여와 행정소통을 통한 지역사회 갈등완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시민권익위원회와의 통합을 수용함.

□ 검토필요 2건(수용 2)

공약명 (추진부서)	배심원단 권고안	수용여부 검토 결과	
		수용여부	수용(수용 불가) 사유
(3-8-1) 장애인 회관 건립 (장애인복지과)	① 아래 세가지 제안 중 택일 1) 타 공공시설의 빈공간 활용 2) 국비 50% 이상 확보 및 장애인 각 단체에 지원하는 운영비용을 중단하고 단체를 전부 회관에 입주시키는 조건부로 추진 3) 회관 대신 수련원이나 인권센터 건립 (단체 입주는 건물 일부만 활용)	수용	○ (권고안 2번 선택) 우리시 재정여건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등 국비활동을 강화하고 향후 회관 입주시 입주단체의 지원비중 임차료부분을 공제하여 회관건립에 따른 재정손실에 최소화하도록 노력
(3-4-1) 광주장애인 직업 교육원 신설 (장애인복지과)	② 인화학교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협회가 아닌 일반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시설 또는 수련원 건립 ※ 수련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 활용 가능한 시설	수용	○ 그간 인화학교 부지 활용 방안 마련 TF 운영(2016), 관련 연구용역 수행(2017) 등을 통해 지역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, 장애인편의시설이 갖춰진 여가 공간인 장애인수련원 건립 희망 ○ 따라서, 시민배심원단 권고안을 수용하여 '광주장애인 직업 교육원 신설' 공약을 '광주장애인수련원 신설'로 변경하여 이행